

정부, ‘원유 스와프 제도’ 시행 준비 경보단계 점검… 유사시 상향 검토

원유 수급상황 점검회의

산업부, 원유 공급망 리스크 점검
비중동산 대체물량 확보 등 대응
“위기상황 발생시 정책역량 총동원”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홍해 해상 수송로의 통항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가 정유 및 해운업계와 함께 국내 원유 도입선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비상 수급대책 마련에 나섰다. 유사시 비축유 스와프 제도를 즉시 가동하고 대체 우회 항로를 확보하는 등 공급망 교란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27일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산업통상부는 27일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 주재로 정유업계 및 해운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유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원유 수출 터미널인 홍해 안부항을 비롯한 주요 해상 수송로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수급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국내 도입 원유는 7~8월 물량의 경우 전년 대비 100%를 초과해 확보한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상태다. 오는 9월 도입분 역시 90% 이상 차질 없이 확보해 당장 눈앞에 닥친 수급 우려는 낮은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사우디 안부항을 거치는 유조선이 홍해를 통항할 때 돌발 위험요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선제적인 공급망 리스크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정유·해운업계는 민관 실시간 상황 공유체계를 즉시 가동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에즈 운하와 수메드 파이프라인 등을 통한 우회 수송로 협

의에 착수하고,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비중동산 대체물량 확보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유사시 즉각 물량을 융통할 수 있는 ‘원유 스와프 제도’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향후 상황에 따라 원유 수급 위기경보 체계를 면밀히 점검해 필요할 경우 경보 단계를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회의에서 “위기상황 발생시, 비축유 스와프 제도 즉시 시행 등 가용한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라며 “중동상황 변화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생활과 우리 경제에 차질이 없도록 정유업계와 해운업계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24일 8차 석유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대를 돌파하는 등 국제유가가 급등세 속에서도 물가와 민생 부담을 고려해 최장 4주간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은행권 ‘홍콩H지수 ELS 제재’ 최종결론 지연

금융위, 제재 실효성·비례성 고심
이달 정례회의 상정 여부 불투명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안 전파매와 관련한 은행권 제재 확정이 이달을 넘길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내부에서 과징금 규모와 제재 수위를 둘러싼 협의가 이어지면서 오는 31일 정례회의 상정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홍콩H지수 ELS 제재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과징금 규모와 추가 감경 여부를 둘러싼 협의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총 6000억원 인박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수정안을 금융위에 제출했다. 다만 해당 금액은 금융위 의결을 거친 최종 제재 수준이 아니라 금감원 단계에서 산정한 안이다.

앞서 금감원이 제시한 과징금은 약 1조 40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금융위가 지난 5월 산정 근거와 제재 수준을 다시 살펴 보도록 하면서 위반 동기와 방법에 대한 평가가 조정됐고, 수정안의 과징금 규모도 기존의 절반 이하로 축소됐다.

현재 금융위는 수정안을 바탕으로 과징금 산정의 적정성과 은행별 제재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남아 있어 최종 일정은 아직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홍콩H지수 ELS에서 발생한 은행권 고객 손실은 이미 수조원에 이른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4년 말까지 손실이 확정된 계좌는 17만개였으며, 투자 원금 10조 4000억원 가운데 4조 6000억원이 손실 처리됐다. 누적 손실률은 44.2%로 집계됐다.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은행권은 홍콩H지수 ELS 손실과 관련해 이미 대규모 자율배상을 실시한 만큼, 별도로 가액의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 제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은행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판매 수수료에 그치는 데도 전체 판매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의 고민도 적지 않다. 이번 사안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1년 3월 시행된 이후 대규모 불완전판매에 과징금이 적용되는 첫 사례다. 과징금을 추가로 큰 폭 감경할 경우 소비자보호 원칙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만큼, 금융위는 제재의 실효성과 비례성을 함께 따져 보고 있다. 통상 8월에는 금융위 정례회의가 열리지 않는 만큼 제재안 확정은 9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금융위가 8월 중 임시회의를 열어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지난해 9월 외부 해킹으로 고객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 제재안은 오는 31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지난

4월 말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개월 반과 과징금 50억원을 부과하고, 조자진 전 대표에게 문책경고를 내리는 내용의 제재안을 금융위에 넘겼다.

금융위는 지난달 25일과 이달 23일 두 차례 안전소위를 열어 금감원과 롯데카드 측의 입장을 듣고 주요 쟁점을 검토했다. 이에 따라 정례회의에서는 금감원이 제시한 제재 수위를 그대로 확정할지, 일부 낮출지를 두고 최종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외부 해킹은 사고의 원인이고, 개인정보 유출은 그에 따른 피해 결과다. 당국 내부에서는 외부 공격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당시 보안 관리가 미흡해 대규모 정보 유출을 막지 못한 만큼 롯데카드의 책임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다만 외부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금융회사에 영업정지를 부과한 전례가 없다는 점은 부담이다.

금융권에서는 사고의 특수성과 사후 수습 노력, 2차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 기간이나 과징금이 일부 감경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나유리 기자 yul115@



metro

건보료 공제 축소… 178만명 보험료 오른다

소득월액 공제 2000만원 → 1000만원

고정적으로 받는 월급 말고도 임대소득 등을 받아들이는 직장인의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이 현행 대비 늘어날 전망이다.

27일 보건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직장인이 내야 하는 건보료는 크게 두 가지다. 회사에서 받는 순수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가 있고, 월급을 제외하고 이자·배당·임대·사업 등으로 얻는 부수입에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다. 그동안 직장인은 월급 외 소득이 있더라도 일정 금액을 차감한 뒤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 왔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바로 이 소득월액 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던 공제액을 현행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50% 삭감하는 것이다. 전체 종합소득에 그대로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와 달리, 직장가입자에게만 부여되던 공

제 혜택을 줄여 가입자 간 형평성을 맞춘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내거나 부담이 늘어나는 직장가입자 수는 178만 명이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8.9%를 차지한다.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7070억 원의 건강보험 수입이 확충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직장인의 보수 외 소득 공제 기준은 2012년 9월 7200만 원에서 2018년 7월 3400만 원, 2022년 9월 2000만 원으로 잇따라 축소됐다.

동일한 소득을 올린다면 동일한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됐다. 이에 전체 직장가입자 중 일부에게만 제공되던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정부는 공정한 부과기준 확립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확보된 재정을 지역 및 필수 의료 지원 확대, 희귀 및 중증질환 보장 강화 등 꼭 필요한 곳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인수후보 옥석 가리기… 자본투입 규모 ‘축각’

» 1면 ‘새 주인 찾는 보험사…’서 계속

롯데손보 관계자는 “매각은 최대주주가 주도하는 사안”이라며 “현재 회사는 경영개선계획 이행과 자본건전성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 KDB생명, 본입찰 가시권

산업은행이 일곱 번째 매각에 나선 KDB생명은 8월 7일 본입찰 가능성이 거론된다. 예비입찰에는 삼성·한화·교보생명 과 흥국생명, 한국투자금융지주 등 5곳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진 설명회와 실사도 대부분 마무리됐다. 다만 본입찰 날짜와 참여 후보는 아직 공식 확정되지 않았다.

업계는 삼성생명과 흥국생명,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완주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경영진 면담과 실사를 진행해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흥국생명은 KDB생명을 품으면 자산 규모를 약 40조원으로 키우고 전속설계사 채널을 보강할 수 있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보험업 진출이라는 전략적 필요성이 있다.

KDB생명의 자본 부담은 후보를 가려낼 핵심 변수다. 올해 1분기 지급여력비율(K-ICS)은 경과조치 적용 후 186.1%지만 경과조치를 제외하면 74.5%로 낮아

진다. 산업은행이 매각 전 어느 정도까지 자본을 보강할지, 인수자가 거래 이후 얼마를 추가 투입할지가 제시가격과 함께 본입찰의 승부를 가를 전망이다.

◆ 예별은 지원 조건, 카디프는 제재

예별손보는 4건의 거래 가운데 가장 앞서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0일 OK금융그룹 계열 오케이뱅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배타적 협상과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위한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

OK금융은 예보에 1조 1400억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3년간 4000억원을 자체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원액과 투자계획은 예보가 확정해 발표한 계약 조건이 아니다. SPA 체결과 자금지원 조건 확정,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최종 인수가 가능하다.

카디프생명은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양측이 SPA 문구를 조정 중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NP파리바카디프 보유 지분 85%만 거래할지, 신한은행 지분 15%까지 포함할지 역시 관심사다. 홍콩 H지수 ELS 관련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제재 결과와 매각 지분·가격, 인수 이후 판매량 재편 비용이 남은 변수다. /김주형 기자 gh471@

4MW 등 대용량 CDU 전 라인업 인증 추진

» 1면 ‘LG 액침냉각, 엔비디아…’서 계속

업계에서는 엔비디아 인증이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시장에서 기술 신뢰성을 입증하는 핵심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인증을 확보한 기업은 하이퍼스케일러 등 주요 고객사의 기술 검증 기간을 단축하고 대형 프로젝트 수주 경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LG전자가 이번 인증을 획득한 것도 AI 데이터센터 시장 공략을 확대하고 글로벌 고객사와의 협력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LG전자는 이번 인증을 시작으로 메가와트(MW)급 제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

는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1MW·2.5MW·4MW 등 대용량 CDU 전 라인업을 대상으로 엔비디아 인증 획득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LG전자 ES사업본부장 이재성 사장은 “AI 데이터센터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신뢰성 높은 액체냉각 솔루션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LG전자의 독보적인 자체 냉각 기술과 그룹 차원 역량을 결집한 ‘원(ONE) LG’ 통합 인프라 솔루션 역량을 바탕으로, AI 데이터센터 분야의 토털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